

2012. 4. 16. **Vol. 16**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GAP인증 제도개선 추진
탄소성적표지제도 현황 및 성과

거시경제 동향

201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기획 정보

미국 작물보험의 최근 현황과 쟁점

농정 여론 동향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 농촌지역 일손 부족 실태
· 외국인 노동자 활용 불편 사항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통계로 본 한국과 EU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GAP인증 제도개선 추진

※ 본 자료는 4월 6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GAP인증! 농업인 참여는 쉽게, 부담은 최소화」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GAP인증 현황

- 2012년 GAP인증 농가는 5만 명으로 2011년(3만 7천 명)보다 35.1% 증가
 - 전체 농가대비 비중: ('09) 2.4% → ('10) 2.9 → ('11) 3.2 → ('12) 4.2

< GAP인증 현황 >

단위: 개, 건, 호, 톤

구 분	대상품목	인증품목	인증건수	농가 수	생산 계획량
2012.3월	전품목	89	1,980	37,627	650,480
2011	전품목	89	1,756	37,146	642,165
2010	전품목	86	1,459	34,421	509,931
2009	전품목	59	1,233	28,562	434,047
2008	105	59	1,053	25,158	419,842
2007	100	50	364	16,796	331,421
2006	96	45	220	3,659	101,354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

□ 주요 내용

- 금년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 집단인증제 도입 등 GAP 참여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불편 최소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추진
 - 친환경농산물인증제와 형평성 등을 고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개정 GAP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금년 7월 22

일부터)되어 인증농가의 부담이 연간 2.5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 인증 유효기간 2년(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 ('11년) GAP인증 1,756건 37.1천 명(1건당 평균 21명, 평균 인증비용 284천 원)

→ GAP 인증 1,756건 기준 연간 인증비용 약 5억 원 소요

-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 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하고, 생산 계획서 및 재배이력관리 등을 생산조직에서 총괄 관리
- 농가에서 보유한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GAP시설 지정기준을 마련 하여 원거리의 GAP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GAP인증 농업인에게 잔류농약 분석 등 안전성 검사비 17억 원을 지원 하는 등 GAP제도 운영 예산 30억을 확보하여 GAP제도 활성화 추진
 - GAP인증 참여 농가 45천명에게 안전성 검사비 17억 원을 지원하고, 인증기관에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GAP인증 확산 유도
 - GAP인증 참여 확대를 위한 생산 여건 조성사업(2억 원)을 통해 농산물 주산단지들을 대상으로 GAP생산자 조직을 육성할 계획
 - GAP농산물의 품목별 공급시기, 공급량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 유통업체 등에 제공하는 등 유통 활성화 사업(1억 원)도 추진
- GAP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지원, 학교급식 및 군납 등 소비처를 발굴하고, 농촌체험행사를 지원하는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국가 인증 농식품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농장 『스타팜』을 활용 소비자 대상 농촌체험행사를 150회 7천명 대상으로 실시,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

주요 농정 이슈_2

탄소성적표지제도 현황 및 성과

※ 본 자료는 4월 9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탄소성적표지, 기후변화 대응 대표 인증제도로 정착」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탄소성적표지 제도 개요

- (정의) 제품(서비스 포함)의 원료채취,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

※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8호)

- (인증 유형) **탄소배출량 인증(1단계)**과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으로 구분
 - (탄소배출량 인증) 전 과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부착**
 -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배출량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

□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성과 및 효과

- 2009년 도입 첫 해 인증기업이 33개, 제품은 111개였으나 2010년 4월 현재 **103개 기업, 548개 제품 인증**
 - ※ 탄소배출량 인증: 103개 기업, 530개 제품
 - ※ 저탄소제품 인증: 14개 기업, 18개 제품
- 인증기업 수로는 3배, 인증제품 수는 5배가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수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탄소성적표지의 2단계 인증인 저탄소제품 인증은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뿐 아니라, 기업의 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선진화된 정책 수단으로서 부각
 - 저탄소제품 인증은 2011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탄소배출량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부여
 - ※ 4월 현재,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CJ제일제당의 햇반 등 18개 제품이 저탄소인증 부여
-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한 18개 제품의 2011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같은 양을 저탄소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26만 6천 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
 -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 제품은 사용단계 에너지 효율 및 연비 향상, 제품 생산 효율화, 포장재 및 제품 경량화 등 제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녹색기술을 개발·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
 - 이는 어린소나무 9,60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으며, 제주도가 2달 정도 쓰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
- 탄소성적표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린카드와 연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평가 시 가점 부여, 녹색제품 종합낙찰방식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

거시경제 동향

201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4월 9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 동월대비 2.8% **상승**

- 농림수산물: 채소류의 **상승폭이 확대** 되고 과일, 축산물 등도 올라 전월대비 1.4% **상승**

- 공산품: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0.7% **상승**

※ 두바이유(전월대비 +5.4%): 2012.2월 평균 116.2(\$/bbl) → 3월 평균 122.5(\$/bbl)

- 서비스: 운수 및 기타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

단위: %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1.12월	'12.1월	2월	3월	'11.12월	'12.1월	2월	3월
총 지 수	1000	0.2	0.7	0.7	0.6	4.3	3.4	3.5	2
농 립 수 산 품	43.6	4.4	0.5	4.3	1.4	-0.2	-8.0	-4.4	-3.1
곡	11.0	0.9	0.7	0.3	0.1	16.7	15.8	13.1	9.3
채 소	7.4	5.9	10.7	7.6	10.6	-12.8	-14.4	-2.5	3.7
과 실	5.3	8.2	11.1	10.6	2.1	-25.6	-19.6	-9.1	-2.6
축 산 물	12.0	3.0	-9.8	-0.3	1.4	14.0	-14.0	-15.0	-16.7
수 산 식 품	5.3	-1.5	-1.2	-0.3	0.2	-4.2	-8.6	-8.6	-8.5
공 산 품	644.8	-0.1	0.7	0.7	0.7	5.3	4.7	4.3	3.1
석 유 제 품	59.7	0.6	2.0	2.2	2.6	16.9	14.6	15.2	10.6
화 학 제 품	55.2	-1.4	2.6	2.8	1.6	4.9	4.3	4.0	2.8
1 차 금 속 제 품	65.6	-0.3	0.3	1.3	0.4	2.4	1.6	1.2	0.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93.7	-0.2	0.0	-0.3	-0.3	-4.3	-4.2	-4.8	-5.0
전 력 · 수 도 · 가 스	44.5	2.6	0.1	0.2	0.4	12.0	10.2	10.3	10.8
서 비 스	264.4	-0.1	0.9	0.0	0.2	1.1	1.3	1.3	1.3
운 수	61.6	-0.2	0.4	-0.3	0.3	2.5	2.5	2.1	2.4
리 스 및 임 대	2.5	0.3	-0.4	-0.5	-1.1	0.2	0.2	-0.1	-1.2
전 문 서 비 스	43.3	0.0	1.9	0.2	0.2	2.4	3.6	3.5	2.9
기 타 서 비 스	31.1	-0.1	1.4	0.2	0.4	3.2	2.9	3.0	3.3

○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이 전월대비 1.7% 상승,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6.5% 상승**, 에너지는 전월대비 1.6% 상승, IT는 전월대비 포함,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는 전월대비 0.3% **상승**

<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

단위: %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1.12월	'12.1월	2월	3월	'11.12월	'12.1월	2월	3월
식 료 품	81.3	1.6	0.4	1.5	1.7	2.8	-1.8	0.0	0.4
식 료 품 이 외	918.7	0.2	0.7	0.6	0.5	4.5	4.0	3.8	3.0
신 선 식 품	16.4	4.9	8.5	7.3	6.5	-19.4	-19.0	-10.0	-4.6
신선식품이외	983.6	0.2	0.6	0.6	0.4	4.8	4.0	3.8	2.9
에 너 지	93.8	1.2	1.0	1.1	1.6	16.1	13.0	13.3	10.7
에 너 지 이 외	906.2	0.2	0.7	0.7	0.4	2.8	2.2	2.1	1.7
I T	175.1	-0.1	0.1	0.0	0.0	-1.7	-2.1	-2.3	-2.4
I T 이 외	824.9	0.3	0.8	0.8	0.7	5.2	4.2	4.2	3.5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1	0.4	0.6	0.3	3.4	2.8	2.5	1.9

□ 참고: 2012년 3월 말 외환보유액

○ 2012.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159.5억 달러로 전월 말 (3,158.0억 달러)보다 1.5억 달러 증가

○ 2012.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

※ 자료: 한국은행, 4월 3일 보도자료

기획 정보

미국 작물보험의 최근 현황과 쟁점

※ 본 자료는 2010년 12월 미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에서 발표한 「Federal Crop Insurance: Background and Issues」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작물보험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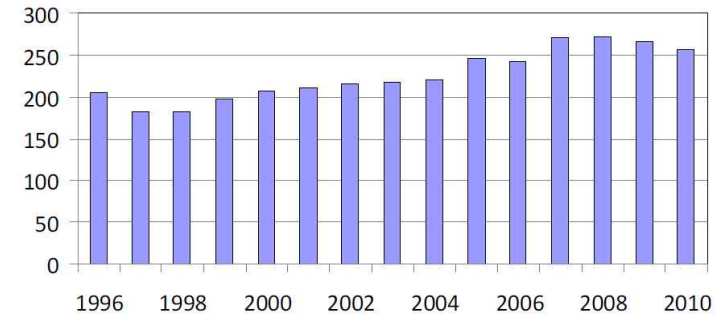
- 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농가의 작물 수확량 및 수입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함.
- 보험 상품들은 인증이 된 16개의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
 - 보험 회사의 손실은 USDA에 의해 재보증 받고, 그들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은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 받음.
- 보험료는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보험료의 일부분은 정부가 지원함.
 - 평균적으로 **정부는 전체 보험료의 약 60% 지원**하면, **재해 보상 (CAT: Catastrophic Coverage)의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작물보험 연앙

- 2010년, 2억 5천 5백만 에이커(acres) 면적이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음.
 - 주요작물(**옥수수 83%, 면화 91%, 콩 84%, 밀 86%**)의 재배면적이 **총 가입면적의 3/4를 차지**
- 작물보험은 **최근 축산부분에 대한 보장도 가능**해져 축산과 낙농 생산자를 수입 손실과 가격 하락으로부터 보호

< 작물보험 가입 면적 >

단위: 백만 에이커(acres)



□ 작물보험의 종류

- 작물 보험은 일반적으로 산출(Yield-based) 또는 수입(Revenue-based) 기반을 바탕으로 함.
 - **산출기반 보험**: 생산자의 "정상"(기존의) 산출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산출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
 - **수입기반 보험**: 상품산출량, 가격 감소로 인해 농작물 수입 손실 발생 시 보상
- 2010년, 2백만 개의 작물 보험 상품들이 판매되었으며, 그 중 **56%는 수입 기반 상품임**.
 -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입 기반상품은 전체 상품의 4분의 3을 차지**함.

□ 작물 보험에 대한 보조금과 분포

-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38%~80%까지의 금액을 정부가 보조
 - 보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비율은 감소하지만,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총 보험료 보조 금액은 증가

< 작물보험 보험료 보조 - 총 보험료 중 정부 보조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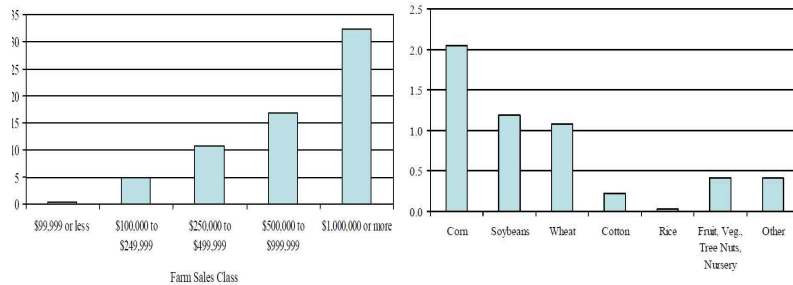
보장수준(%)	재해보험(CAT)	50	55	60	65	70	75	80	85
보조비율	100	67	64	64	59	59	55	48	38

- 작물 보험에 대한 생산자 보조금은 보험료와 보험상품의 위험부담비중에 비례함.
- 따라서, 영농규모가 클수록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위험이 증가하여 전체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을 증가시킴.
- 2009년, **평균 보험료 보조금은 매출 10만 달러 이하 농가당 4백 달러, 매출 1백만 달러 이상의 농가당 3만2천 달러** 수준
- 작물별로는, 옥수수, 밀, 콩 그리고 면화를 위한 생산자 보조금 규모는 모두 합쳐 보조금의 80% 이상을 차지함.

< 농가당 평균 작물보험 보조금-2009 > < 작물별 작물보험 보조금-2009 >

단위: 농가당 1,000\$

단위: 10억 \$



□ 작물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비용

- 작물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비용은 위험관리청(RMA: USDA's Risk Management Agency)의 급여 및 비용, 농가의 보험료 보조금, 민간 보험 회사의 환급금(보상비)으로 구성

- 최대 비용 항목은 농가의 보험료 보조금('10년 47억 달러), 민간 보험 회사의 관리 및 운영비 (A&O: Administrative and Operating) 환급금('10년 14억 달러) 등 순임.
- 최근 작물 보험에 대한 정부의 비용은 보험회사의 관리 및 운영비 (A&O)환급금 상승으로 증가
 - 관리 및 운영비(A&O) 환급금의 상승은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기인

< 작물보험에 대한 정부 비용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프로그램 이익 또는 (손실) ¹⁾	보험료 보조금	민간보험회사 A&O 비 환급	기타 비용 ²⁾	총 정부 비용
2000	196	1,353	540	86	2,175
2001	725	1,707	648	82	3,162
2002	1,182	1,513	656	115	3,466
2003	822	1,871	743	149	3,588
2004	(305)	2,387	900	143	3,125
2005	(293)	2,070	783	169	2,699
2006	(31)	2,517	960	125	3,571
2007	(1,068)	3,544	1,341	123	3,940
2008	(1,717)	5,301	2,016	137	5,737
2009	108	5,198	1,602	131	7,039
2010	(2,523)	4,680	1,371	143	3,670

주: 1) 정부의 인수 손실(underwriting losses) 또는 이익(underwriting gains) = 작물손실에 대한 총 보상비와 총 보험비의 차이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인수수익 또는 손실을 더하거나 뺀 것
 2) 기타비용은 기본적으로 RMA(Risk Management Agency)의 봉급과 2002년부터는 '2000년 농업 위험 보호법'에 의한 다양한 연구개발 비용은 포함

- **연방정부의 지출 감축방안** 중의 하나로 2010년 '표준재보험계약(SRA: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의 재협상에서, **A&O 환급 기준이 '보험료 가격' 대신 '판매 보험 상품 수'와 연동케 하여 실제 비용에 반영**토록 함.

※ 표준 재보험 계약(SRA: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

→ 보험회사의 관리 및 운영비(A&O) 환급 시 미농무성(USDA)과 민간 기업 사이의 위험 공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프로그램 비용을 결정시 큰 역할 담당

- 보험 회사는 위험부담이 높은 보험 상품의 법적 책임의 일부를 정부에 이전하고, 위험부담이 낮은 보험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손실은 유지
- SRA는 관리 및 운영비(A&O) 환급금은 최대 연간 13억 달러(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 최소 11억 달러로 설정

□ 작물보험에 대한 주요 쟁점

(1) 보험상품의 불합리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미흡

- 기존의 낮은 산출 기준에 의한 보장 수준이 매우 낮아 실질 보상수준은 매우 미흡
 - 현재의 보증 수준이 과거 10년 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의 산출량 증가, 개량 종자 사용, 관리 방법 개선 등 산출량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적정 가중치가 반영되지 못함에 기인
 - 또한, 현재의 작물보험은 비료, 연료 및 관개 펌프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투입물의 가격 변동성이 고려되지 않음.

(2) 적정 보험료 책정 문제

- 현재의 인수수준(buy-up) 보장보험과 대상 농산물에 대한 보험료가 비현실적임.
 - 특히, 옥수수 생산자의 경우 손실률(보상금/보험료)이 자주 '1'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의 필요성 대두
 - 따라서 RMA는 손실실적자료(historical loss data)의 적용률 검토 중임. 보험료를 결정 시 모든 손실실적에 대한 동일 가중치 부여 논의

(3) 보상 발동기준에 미달하는 손실분에 대한 정부보조 미흡

- 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 발동기준 미달 손실분에 대한 정부 보상 필요성 제기
 - 발동기준 및 보험 보증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실제생산이력(APH: Actual Production History)의 적절성 여부 검토 요구
 - 미국 사탕수수연맹은 실제생산이력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품종에 대하여 실제생산이력에 적용되는 사례 지적

※ 실제생산이력(APH: Actual Production History): 산출기반보험에서 “정상”(기준)산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자로 하여금 최근 4~10년간의 실제 연간 농작물 산출량의 단순 평균치

(4) 보험 회사의 지역 차별적 보험 보증 제공 문제

- 상대적으로 보험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편중된 보험 보증 적용으로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보험 상품 가입조차 곤란

(5) 양적기준 중심의 보험 보증 한계

- 보험 계약 시 작물 품질 손실에 대한 가격 할인(discount)가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6) 보장내역의 중복 수혜 문제

- 농가 안전망(farm safety net) 차원의 작물 보험과 기타 농가 프로그램(farm programs)간 중복 수혜 폐해 발생

□ 농촌 일손 부족문제 심각, 인력은행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 필요

- 4~5월 농번기 때면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농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농촌 인건비가 상승해 남자는 10만 원선 여자는 7만원 을 호가하면서 생산비 증가
- 공공근로사업으로 농번기 때 일손 구하기 더 어려워, 공공근로 농한기만 시행을
- 농촌인력은행 설치해 시기별, 품목별, 지역별 특성 살린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 1사1촌, 사회봉사 활동, 귀농귀촌 촉진, 공익요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 필요

- 파종 시기나 정식이 대부분 4~5월에 이루어져야 하고 파수의 적화도 5~6월에 전 농가가 동시에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산지가 집단화** 되면서 같은 시기에 **노동력이 필요하여 매년 일손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음.<김정오, 경남 거창>
- 농촌지역 일손부족은 고령화, 공공근로 인력유출, 농촌인력 감소, 힘든 농사일보다는 건설현장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임. 공사현장에서 **남자는 약 8만 원~10만 원, 여자는 6~7만 원인데 반해 농촌은 각 7만 원, 5만 원선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박건환, 강원 홍천>
- 2~3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하우스 열풍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졌음. 9만 원이던 **인건비가 올해 12만 원으로 올라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임.<이윤희, 강원 철원>
- 고추 수확은 서로 품앗이로 해결하거나 여자 일당(4만 원 정도 함)으로 처리하고 있음. 남자일손이 필요할 때에는 광주 인력시장에서 불러다 쓰기도 하지만 **인력시장 남자는 10만 원에 차비 2만 원을 더 주어야 하는 실정**임.<나종주, 전남 화순>
- 정부정책 중 숲가꾸기 등 **공공근로로 인해 농번기때 일할 사람들 못 구하는 농가들이 허다함. 1년 내내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농한기때만 활용**한다면 일손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주양호, 전남 장흥>

- 농번기만이라도 공공근로를 없애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인력을 농가와 협력해 비용을 반반 부담하여 농사일에 투입**해야 할 것임.<강문근, 충북 청원>
- **농번기에 집중하는 농촌 노동수요의 계절성**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시기별·품목별·지역별 맞춤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김병철, 경남 김해>
- **인력은행을 만들어 농업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귀농 희망자, 도시 근로 휴가자, 군인, 학생들이 지원**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음.<이현순, 경남 통영>
- **각 지자체별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다양한 영농지원단을 만들어** 농번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김은규, 전남 강진>
- **농촌인력지원단을 지자체나 농협에서 관리하고 도시 아파트지역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도시인력을 농촌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강구되길 바람.<김상우, 제주 서귀포>
- 획기적인 청년대상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농업관련 교육을 받으며 가지게 된 꿈이 호미를 들고 밭으로 가게 했음.<박향숙, 전남 완도>
- **기업체에서 1사1촌 등과 같이 협력업체를 많이 장려**한다면 인력지원으로 농촌을 돕고, 인력을 지원받는 농업인은 직거래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임.<방호정, 경남 하동>
- 거주하는 지역이 바닷가와 접해 있고 농번기 4~6월이 되면 바닷가에 미역, 다시마 생산 철과 겹쳐 그쪽 일을 하러 가기가 일쑤임. 그나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봉사단이 지역마다 있어 부족한 인력을 지원**받고 있음.<최시훈, 부산 기장>
- 농촌 지역의 일손이 부족해 농사일을 포기하는 실정임. **사회 단체나 각종 봉사단체들처럼 농업일손 봉사단체도 있었으면 함**.<옥을석, 경남 거제>

- **방학기간을 이용해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함. 전작 기계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야 할 것임.<전재경, 경북 의성>
- 과수의 경우엔 젊은 사람이 필요한 실정임. 지금은 일손부족 현상으로 농사일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임. 이에 관련 내용을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박종임, 충북 괴산>
- 농촌지역의 농공단지 역시 젊은 인력을 흡수하여 농촌일손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음. 노동력의 수요를 시기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고정적 노동력 수요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지역적으로 노동력 공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음.<김인남, 경북 상주>

□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배경 확대 등 지원 개선 필요

-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 소통 등 많은 문제있어 외국어 가능한 공익요원 배치
- 외국인 노동자 월 170만 원 지급하고도 외국인 등록증 나오면 사라지기 일쑤
- 외국인 배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배정 받기 별따기, 배정 받아도 비용감당 어려워
-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심사 고용센터가 아닌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현실적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해도 **원활하지 못한 언어소통으로 어려우며, 2~3개월이 지나면 근무지 변경과 이탈 등으로 끝머리를 앓고** 있음. 외국어가 능숙한 공익을 상주시켜 소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것임.<김용덕, 경기 남양주>
-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임.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도우미로 투입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됨.<김갑순, 경북 영양>
-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고용주와 마찰도 많고 어려운 상황**임. 농촌현실을 잘 알고 있는 농협 관계자나 고용센터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잘 점검하여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됨.<김용덕, 경기 남양주>

- 살고 있는 지역은 광주에서 차로 50분 거리로 외국인근로자를 부르기에 애로사항이 많음.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며 길도 잘 몰라 불러서 활용하기엔 아주 어려운 상황**임.<나종주, 전남 화순>
- 외국인 인건비가 월 140~150만 원(숙식까지 제공하면 170만 원 정도임)임. 3개월 내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면 다른 농장으로 옮겨가기가 일쑤임. 외국인 배정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좀 더 많은 배정이 필요하겠음.<문성근, 경남 진주>
- 농업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체류기간과 한국 적응기간의 연장이 필요**함.<임충빈, 경기 안성>
- 외국인을 쓰는 농가도 있지만 **외국인 배정이 턱없이 적어 순서가 돌아오기란 별따기**임. 쓸 수 있다 해도 기본급 자체가 높고 각종 보험 및 숙식 제공 등 요구사항이 많아 내국인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는 실정임.<김민호, 경기 이천>
-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은 높은 편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 숙련할 기회가 적음.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 등이 필요**함.<김병철, 경남 김해>
-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이 일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불법 체류자를 적법 절차를 거쳐 양성화해주고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에도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임.<주양호, 전남 장흥>
- **외국인 근로자는 매일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임.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해 농촌 노동력 지원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함.<김상우, 제주 서귀포>
- 요즘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서류만 보고 심사하여 점수제로 배정한다고 하니 내근만 하는 **고용센터 사람이 농촌현실을 어떻게 알고 점수를 채점할지 의문**임. 차라리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채점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김용덕, 경기 남양주>

□ 기타

○ 귀농귀촌 교육 일반 교육과 분리해야

- 최근 귀농귀촌 열풍으로 많은 교육과 지원사업이 있지만 귀농귀촌 교육은 다른 교육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게다가 기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임. 50대 이상의 귀농귀촌 장려도 좋지만 젊은 사람이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겠음.<이윤희, 강원 철원>

○ 비료 무상보급 정책 개선돼야

-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 농가에 무료로 비료를 주고 있으나 문제는 잘 가져가지도 않고 가져간다 해도 눈두렁이나 밭두렁에 방치하여 소실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만큼 지급한다면 예산도 절약되고 이장들의 수고도 덜어질 것임.<최영호, 충남 부여>

○ 농촌노인 특별한 복지정책 필요

- 노인을 위한 교육시설, 여가시설들이 도시에는 많이 있지만 농촌노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시설이 20~30km나 멀리 있기에 겨울철 농한기라도 찾아가기 힘든 실정임. 농촌노인은 마을 단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이 필요함.<김병철, 경남 김해>

○ 농촌지역에 종합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 농촌지역은 아직도 재래식 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이라 매년 1회 이상 위생사업소의 처리로 악취는 물론이고 비용, 비위생적인 환경 등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음. 농촌지역에도 종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필요함.<김병철, 경남 김해>

농정 여론 동향_2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4월 9일~13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배추 포기당 5,000원 넘어...정부, 배추수입 검토

- 배추가격이 4월 들어 상품(上品) 기준으로 포기당 5,000원대. 4.12일 농림수산식품부/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서울 가락시장에서 올 들어 배추 상품기준 경매가격이 1월 3,500원 → 2월 5,800원 → 3월 1만300원 → 4월 1만8,400원으로 3개월 사이에 5배 급등.

배추가격이 오른 이유는 월동 배추 저장상태 악화와 봄배추 재배면적 급감으로 당분간 배추가격 상승세 전망. 정부,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축해둔 겨울배추 물량을 시장에 대량 방출 중(전체 비축물량 6000t 가운데 3월~4월 4000t 시장에 공급)이며, '배추 수입' 적극 검토



자료: 문화일보(2012.4.12).

□ 국제곡물가 폭등...축산농 생산비 가장 우려

- 지난해 10월 이후 연말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곡물가격이 올 들어 가파른 상승. 대두는 연초 1t당 440달러 안팎→최근 520달러로 폭등. 옥수수 가격은 올 1월 248달러→2월 252달러→3월 260달러→4.4일 현재 252달러에 거래. 대두와 옥수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은 수급불균형과 선물투기 증가가 원인. 하반기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수급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자료: 농민신문(2012.4.9).

□ 중국 양념채소 국내 자급력 위협

- 중국산 양념채소의 수입비중 높아 국내 자급력 위협. 2010년 우리나라의 채소류 수입대상국별 비중은 중국 73.9%(‘97년 36.7%), 미국 9.2%, 일본 3.2%, 태국 2.3%로 중국이 압도적. 이는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인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에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신선/생장 형태를 피해 냉동/건조/조제저장처리 등 우회 수입 증가 때문. 또한 중국산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 및 확대될 전망(농경연 전형진 박사)

자료: 원예산업신문(2012.4.11).

□ 반복되는 농작물재해 ‘제도개선’ 시급

- 이달 초 급작스런 강풍으로 인해 농식품부 추산(4.6일) 1만5,000여동, 약 1,000ha에 달하는 시설하우스 구조물 파손 혹은 비닐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대책법·재해보험 ‘비현실적’이어서 농가 피해 구제에 한계점 노출. 특히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재난지원금은 용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농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부족으로 당장 모든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불가능, 대다수 농가가 소농 구조여서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이는데 한계, 풍수해보험 역시 소멸성 보험임에도 많은 가입비와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인해 외면. 한농연, 농작물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입안 절실 주장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4.10).

□ 소비자 63% “소용량 제품 필요”

-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최근 6개월 이내 식품 구입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식품 소비’ 조사 결과 양 필요 이상 많아 국내 소비자의 62.9%는 소용량 포장제품이 필요하다고 응답. 소용량 포장제품에 대한 구입의향을 묻는 설문에서

도 응답자의 63.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포장된 양 때문에 구매를 꺼리거나 구매하지 않은 경험은 71.4%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자료: 농민신문(2012.4.11).

□ 비료값 담합 소송 ‘1만 명’ 참여

- 한농연, ‘비료가격 담합 관련 소송’ 1차 모집 결과(4.6일) 1만675명 소송 참여. 5월 말까지 2차 모집. 이번 소송은 비료업체 담합과 관련한 농협의 대책이 미진한데 대해 한농연 제기.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등의 비료구매 입찰에서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의 담합을 벌인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 원의 과징금 부과. 한농연 관계자, 이번 소송으로 국내 농림수산분야 사상 최대의 농업인 집단·공익 소송으로 화학비료 업체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배상 요구, 부당이익금 농업인들에게 환원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4.12).

연구 지원 정보

통계로 본 한국과 EU

※ 본 자료는 3월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과 EU」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경제) 2010년 한국의 GDP는 7,650억 유로로 EU-27 전체(12조 2,570억 유로)의 6.2%,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29,004달러로 EU-27(31,737달러)의 91% 수준임.
- (인구) 200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EU 국가들 1.6명(2008)보다 낮았으며, 한국과 EU의 인구 피라미드는 모두 '점진적 고령화' 형태임.
- (보건) 2009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5년으로 EU의 79.4년보다 높았고, 한국과 EU 모두 사망원인의 1위는 '암'으로 나타남.
- (교육)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의 정부부담 비율'과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각각 48%와 60%로 EU의 5.1%와 86%보다 낮은 한편, 2009년 한국의 30~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0%로 EU(32.3%)보다 27.7%p 높았음.
- (노동시장) 2010년 25~54세의 고용률은 한국이 73.8%로 EU-27(77.6%)보다 낮으나, 55~64세 고용률은 한국(60.9%)이 EU-27(46.3%)보다 14.6%p 높았음.
- (생활수준과 복지) 2010년 분위별 소득점유율은 한국이 1분위가 전체 소득의 6.7%, 5분위가 3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EU-27은 1분위 4.0%, 5분위 4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에너지와 환경)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8년 439백만 톤에서 608백만 톤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169백만 톤 증가한 반면, EU의 배출량은 동일 기간 5,192백만 톤에서 4,615백만 톤으로 감소하였음.
- (교통과 통신) 2010년 한국 16~74세 인구의 1일 1회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65%로 EU-27의 53%보다 높았고, 한국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97%)도 EU-27(70%)보다 높게 나타났음.
- (과학과 기술) 2009년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국내 총지출 비중은 3.6%로 EU의 2.0%보다 높았고, 유럽특허청(EPO) 출원 기준 한국의 특허는 백만 명 당 124.4건(2008)으로 EU(119.5건)보다 많았음.